

데스크 시각

박진표
경제부장

선거는 결국 사람을 드러낸다. 공약의 완성도보다 인간관계의 틈이 먼저 보이고, 출마자의 진심보다 왜곡된 해석이 앞서는 장면도 반복된다.

선거 출마와는 거리가 먼 기자라는 직업임에도 최근 '제45대 광주전남기자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덕분에 이러한 선거제도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만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공약

광주·전남권역 18개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500여 회원의 대표를 선출하는 협회장 선거는 2년마다 한 번씩 치러진다. 규모만 놓고 보면 제한적이지만, 2주일이라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을 직접 돌며 체감한 긴장감은 여느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각종 억측성 유언비어가 떠돌고, 오랜 신뢰로 이어져 온 관계에서 미묘한 거리감이 감지되기도 했다. 선거 기간 선의로 견넨 말이 맥락을 잃고 왜곡되는가하면 공격의 소재가 되는 순간도 있었다.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선거는 평소에는 가려져 있던 사람의 속내까지 여과 없이 비추고 확인할 수 있는 무대"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2000년 신문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후 늘 관찰자의 위치에 있었다. 권력과 제도, 기관 정책과 공무원, 정치인 등을 취재하고 평가하는 역할이었다. 그러나 지

관찰자에서 검증대상으로 발가벗겨지다

난달 광주전남기자협회장 출마선언을 하는 순간 뒤집혔다. 질문하던 사람에서 질문을 받는 사람이 됐고, 평가하던 위치에서 평가받는 대상으로 이동했다. 그동안 기자로서 어떤 말을 해왔는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어떤 인간관계를 쌓아왔는지가 한꺼번에 검증대에 올랐다. 선거라는 무대 위에서 발가벗겨져 심판을 받는 느낌이었고, 솔직히 두렵기도 했다. 협회장 선거를 넘어 동료 기자들 앞에서 기자의 삶과 개인적 삶까지 모두 평가받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지킨 원칙이 하나 있었다. 그동안 접하기 힘들었던 전남 22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기자 회원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 바쁘다는 사정 등이 뒤파렸다. 결국 상당수의 시·군은 방문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도 어렵게 현장을 찾으면 풍경은 달랐다. 대화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어느 지역에선 단 1명의 회원 밖에 만날 수 없었지만, 오히려 2시간 넘게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오지 말라고 했던 이들 모두 "안 만났으면 어쩔뻔 했나"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번 선거를 경험하며 확인한 사실은 분명했다. 사람은 만나야 보이고, 제도는 현장에 가야 실제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선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후보가 지역을 찾는 이유는 단순한 인사 지원이 아니다. 공약은 인쇄물에 적힐 때보다 유권자 앞에서 직접 설명될 때 비로소 무게를 갖는다. 눈을 마주치고 약속하는 순간 그 말은 후보 스스로를 묶는 책임이 된다. 반대로 공약집만 남는 선거는 쉽게 잊히고 책임도 흐려지기 마련이다.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생각하지 못

했던 공약의 오류도 정확히 짚어냈다. 일부 공약은 그 자리에서 폐기될 결정했다. 공직사회에서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좋은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새삼 떠올랐다.

6·3지방선거 냉소 대신 적극 참여를

이번 선거 경험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일단 올해 6·3 지방선거도 그동안 반복돼온 일부 유권자의 무관심이 되풀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앞선다. 선거 때는 후보의 이름은커녕 공약에도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가 끝난 뒤 '뽑아줬더니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고 정치인을 몰아세우는 풍경이 반복될까 걱정스럽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 참여의 의미를 이렇게 경고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차라야 할 대가 중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다." 수천 년을 건너온 이 문장은 오늘의 선거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무관심이 쌓일수록 정치는 소수의 계산과 이해관계에 의해 더 쉽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성숙한 민주주의에서 유권자는 단순한 선택자가 아니다. 투표일에 한 번 표를 던지는 존재에 머물지 않는다. 후보를 직접 만나 공약을 요구하고, 재원 마련과 실행 가능성을 물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주체다.

그리고 선거는 투표함이 닫히는 순간부터가 오히려 진짜 시작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당선 후 임기는 공약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받는 또 하나의 선거 기간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는 무관심 대신 질문이, 냉소 대신 관심과 책임이 작동하는 풍경 있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전남 통합과 도약, 균형 발전 새 모델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 6월 출범한 정부가 AI 산업, 재생 에너지, 수소 산업 등 미래 산업 투자를 강조하는 점은 이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을 국가 AI·신재생에너지 전략의 핵심축으로 육성하려는 정책 기조가 분명해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특히 나주시는 한전 본부와 에너지 관련 기관, 에너지공과대학(肯特) 등이 집적된 에너지밸리를 기반으로 첨단 에너지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후보지 1순위로 가시화되어 첨단 에너지 연구 중심지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전남 서남부권에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조성 추진, 영암의 수소 인프라 구축 계획, 그리고 광주의 AI 산업단지 조성과 공조기(공기조화기) 생산라인 설치 등 대기업 투자가 이뤄지면서 이 지역이 AI·에너지 융합 거점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정부, 대기업의 반도체·에너지 분야 투자가 이 지역에 본격화될 경우, 수도권, 경부선축에 집중돼 있던 자본과 산업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되어 국가 균형 발전의 이슈가 되고, 지역 산업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가 신산업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도는 행정 통합 차원에서 유기적 협력 전략으로 최적의 기관 유치에 나서야 한다.

이제 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성장 잠재력

을 훼손한다"며 전국을 '5극 3특'으로 나눠 다각 체제의 지역 맞춤 성장을 국가 균형 발전의 생존 전략으로 제시하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은 지방 주도 성장전략과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전국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읽힌다. 또한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삼각벨트 구축을 통해 반도체 핵심 공장(Mother Factory)을 배치하여 제조업 공동화(空洞化)의 대응책도 밝혔다.

사실 전남 서남부권은 대규모 전력과 용수 확보가 용이해 반도체 공급망을 비수도권으로 확장하는 대안 지역이다. 솔라시도(해남·영암)를 중심으로 대규모 AI 인프라와 반도체 전후방 산업을 연계 육성하여 독자적인 산업생태계를 갖춘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지난주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 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정례화 오찬 회동에서 "행정 통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호남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통 큰 지원도 약속했다.

이렇듯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표명한 바, 시·도는 통합하여 초광역권 도약의 기회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 지역 특성을 살린 재생에너지, AI 데이터센터, 수소,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미래 산업 하브'로서 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곧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며 시대적 요청이다. 이것이 이 지역의 오랜 기간 소외된 한계를 뛰어넘어 혁신적 성장의 출발점이며 국가 균형 발전의 새 모델이다.

또한 규제의 빗장을 과감히 풀어야 한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데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혁신은 불가능하다. 특정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규제를 푸는 것을 넘어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로 지정하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로보택시가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달리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되 기업의 도전은 장려하는 규제프리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테슬라나 에이모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광주에서 탄생할 수 있다.

2026년은 광주가 '자동차 생산 기지'에서 '모빌리티 기술의 발원지'로 거듭나는 원년이 될 것이다. 확보된 예산은 우리에게 주어진 연료다. 하지만 연료만으로는 차가 가지 않는다. 이제 산·학·연·관 모두가 한뜻으로 운전대를 잡고 함께 액셀을 밟아야 할 때다.

기업은 두려움을 떨치고 과감한 기술 투자에 나서야 하며, 행정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기업의 기여로 곳을 긁어주는 편성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시민들 또한 로보택시가 거리를 누비는 낯선 풍경을 미래의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보여줘야 한다.

변화는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가 되지만 머뭇거리는 자에게는 위기가 된다. 예산 확보라는 마중물에 기업의 도전과 행정의 지원, 시민의 응원이 더해질 때 '광주형 모빌리티'는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이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시동을 걸 때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광주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기고

홍종우
광주미래모빌리티산학연협의회
회장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시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100년간 이어온 내연기관의 광음이 잦아들고 그 자리를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흐르는 '소리 없는 혁명'이 채우고 있다. 바이오로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SDV)의 시대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인 광주는 생존과 도약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둘려온 올해 정부 예산 확보 소식은 지역 산업계에 단비와도 같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고감한 투자이다.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에 배정된 617억원을 포함해 자율주행 실증,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지원 등 기업들이 목말라했던 핵심 예산들이 대거 반영됐다. 이는 정부가 광주의 '미래차 선도도시' 비전에 강력한 신뢰를 보였다는 증거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즉 '골든타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2026년 로보택시 50대 실증, 2028년 200대 운행'

오피니언

社說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지역 미래 담아야

광주·전남 통합을 뒷받침할 '광주·전남 특별법' (특별법)의 초안이 공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엉그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총 8면 24장에 달하는 특별법의 뼈대를 공개했다. 행정통합 협의 기구인 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에는 통합 단체장에게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인공지능(AI)·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보장하는 조항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보완을 거쳐 지역 국회의 풀을 확대하고 특례 기간도 10년으로 설정했으나, 광주·전남은 더 긴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정부의 권한 이양과 규제자유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을 명시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는 것이다.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폭넓게 지역에 양도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AI와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물론 에너지산업과 문화·관광산업, 농수축산업 고도화를 위한 법

적 근거도 포함돼 기대를 품게 한다. 광역 교통과 물류기반 확충, 글로벌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 조항도 있다.

하지만, 연방제 수준의 명실상부한 자치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관건이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특례 지원 기간이 최대 5년이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 중 일정한 비율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통합에 나선 대전·충남의 경우 지방교부세 비율을 확대하고 특례 기간도 10년으로 설정했으나, 광주·전남은 더 긴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특례 기간이나 방식 등은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야 하는 등 사실상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추진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교부세 지원기간을 포함해 광주·전남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특별법안을 도출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해 광주·전남 통합의 대의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검찰 개혁 취지 못 살린 중수청 법안 우려 크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엉그제 공개한 '검찰 개혁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은 공소청법 세부계획을 두고 아당은 물론 지역사회가 '도로 검찰청을 신설하는 꽂'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청구만 전담하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된다. 중수청 법안에는 내부 조직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전문수사관을 뒤 이원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수청은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인 부패, 경제, 공직자,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넘길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수처 사건만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역사회와 법조계는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검찰청 내부 직급 체계와 똑같아 사실상 검찰 척도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검찰 출신 중심의 수사사법관이 경찰 중심의 전문수사관에게 수사 지시를 내리는 식으로 운영돼 위계가 생기고,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취지로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하는데 새겨들어야 할 사안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을 가리킨다면 입법 예고한 이번 법안은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에 해당한다. 검찰개혁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한 어정쩡한 절충안이라는 우려가 있다면, 그 취지에 맞게 대폭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넘길 수 있도록

無等鼓

MIT의 청소부 월은 필즈상 수상자인 교수는 복도 칠판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낸 수학 난제를 풀어낸다. 또 학교 앞 주점에서 '아는 척하는 MIT 학생들과 논쟁을 벌이며 유명한 대사를 남긴다. 월은 '너의 생각은 없고 책에서 본 걸 그대로 말한다'며 상대가 읽었거나 정독하고 있는 책 제목을 나열한 뒤 '공공 도서관 연체료 몇 달 라면 다 배울 수 있다'고 일침을 가한다.

영화 '굿 월 헌팅' 속 월처럼 우리 삶 곳곳에 숨은 고수들이 많다. 아주 사적인 필자와 최근 경험을 예로 들자면, 서울에 눈이 내리던 날 '종로 11번' 마을 버스 안에서 심금을 울리

는 음악을 만날 수 있었다. 운전기사의 선곡 수준은 수십 년 전 라디오 FM 심야 영화음악의 감동에 버금갔다. 버스 창밖 광화문의 풍경은 마치 '설국'처럼 펼쳐졌고, 신들린 선율에 하자를 놓칠 뻔했다.

또 여의도 앞 한 건물을 관리하는 노인의 책상에는 신예작가들의 신간 소설집이 번갈아 놓여 있다. 조그만 책상용 전등을 켜고 책을 읽고 있는 노인의 평온한 얼굴을 퇴근길이면 건물 현관 유리문을 통해 볼 수 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와 건물 관

리인은 적어도 좋은 음악과 책을 즐길 줄 아는 일상 속 '감성 고수들'이다.

가장 많은 고수들이 칼을 숨기고 있는 곳은 단연 정치판이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치계 고수는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이다. 박 의원은 국내 유명 뉴스 채널과 유튜브 채널 1순위다. 그가 각종 매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페도난마'의 분석과 거친 없는 일침 덕분이다. 최근 인

기를 끌고 있는 요리 경쟁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의 고수들처럼 박 의원이 선보이는 '정치 밤상'은 재료 본연의 맛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고